



최근의 출산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특별좌담회

일시 : 2000년 11월 13일 (월) 15:00 ~ 16:00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회의실

좌장 : 조남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토론자 : 권태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복지·인구정책연구팀장

박상태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 한국인구학회 회장

송위섭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은성호 보건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 주무 사무관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보험연구팀장

(가나다 순)

좌 장 :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인구정책이 종래의 인구억제 중심에서 인구자질향상과 복지증진으로 전환된 1996년 당시 사회일각에서는 정책 전환에 반대하는 주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저하되어 이제는 선진 고령국가와 더불어 향후 예견되는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에 대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많은 감회를 갖게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6년에 작성된 기존의 인구추계는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평균 출산아수)이 1995년의 1.74명에서 2005년까지 1.71명으로 감소되다가 2015년부터는 1.8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중위추계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출산율의 가정과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9년의 합계출산율 1.42명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좌담회는 최근의 출산동향을 중심으로 저출산의 통계적 의미와 이의 영향을 검토하여 그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출산력 감소추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권태환 : 역시 출산력 감소와 관련하여 최대 관심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인의 의견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산율은 당분간 저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근거는 먼저 서구 국가들의 인구변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UN에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세계인구추계’에 따르면, 유럽국가의 경우 1996년 1.6명 선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출산율이 정작 1998년 조사에서는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구변천이론에 따르면 출산율은 어느 정도 기간동안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안정상태로의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가정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태 : 저는 최근 발표된 결과만으로 출산 동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는 선불리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력에는 혼인율과 피임실천율 등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 현재 우리의 혼인율이나 피임률 등을 고려하여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에 대해 사회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해 온 국가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출산율을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자녀에 대하여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하나의 자산이나 노후를 위한 울타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향후에도 2~3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보편적인 출산패턴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권 : 저는 출산율 변동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인 2.1이하로 떨어진 지난 1980년대 중반이후 약 15년간 저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최근 수년간의 출산수준은 인구대체수준의 20~30% 낮은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저하속도가 다른 서구국가보다 3배 이상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송위섭 : 출산을 결정하는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소득, 부, 시간 가치, 국가보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출산율을 전망하여 보면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시간 가치가 증가하여 출산을 부담시키는 경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 ● ●
출산율 변동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이하로 떨어진
지난 1980년대
중반이후
약 15년간
저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는 자녀 출산을 위해 들여야 할 시간의 금전적 가치는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8년의 경우 경제위기상황으로 출산기피현상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1999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통계는 단기적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출산을 부담스럽게 하는 경제적인 요인들로 인해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출산율 1.42라는 통계수치 자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 나올 2000년 출산율은 더욱 감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그다지 호전되지 않은 까닭에 여전히 출산율 기피 및 연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 장 : 경기 침체시에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2000년은 용띠 해이고, 특히 수십 년에 한 번 오는 흑용 띠라는 점에서 금년도

에는 출산율이나 출생성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요.

박상태 : 송교수께서 경제적인 요인들이 출산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의 선호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준다면 출산력 감소를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환 : 유럽에서 시행되는 정책보다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출산력 감소를 사회적 책임강화로 막아보자는 대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미 유럽의 경험을 통해 어떠한 장려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실 감소냐 증가냐 보다는 재생산이 가능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소하는 출산율을 증가시키자는 것은 곧 사회유지를 위해 일정 출산율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사회는 변화하고 있으며 떨어진 출산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꾀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좌 장 : 일본의 경우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저하되자 소위 '출산율 1.57속크'라는 명제 하에 언론에서도 특집보도

까지 나온 적이 있고 일본 정부는 1990년 내각에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부처간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유급 유아휴직제(1년), 휴직기간중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아동수당제를 포함한 '엔젤플랜(아동복지계획)'의 시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고 1998년도에는 육아휴직 기간중 임금을 종래의 25%에서 40%로 인상하고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3세 이하에서 6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 또한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한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출산패턴은 일본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출산율 감소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권태환 : 실증적으로 유럽의 경우 개인주의 국가들 즉, 국가복지가 원칙적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나라들에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의 가치나 정책이 강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처럼 가족주의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양육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족에 대한 의존이 강하고 부모의 아동에 대한 책임의식 역시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스웨덴의 경우 미혼모 출산율이 국가 출산율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 미혼여성이 혼외 출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사회는 점점 변화하여 전통적인 가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반면, 가족 지향적인 가치관은 여전히 남아 있어 그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태 : 출산력 감소 추세가 서구의 경우 100년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반면, 우리는 불과 30~40년 전까지도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좌 장 : 박 교수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누구나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이미 저출산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 20대 젊은 층의 미혼율 증가에 따른 출산수준의 감소는 더

● ● ●
문제의 핵심은
감소나 증가나
보다는 재생산이
가능할 것인가에

.....
떨어진 출산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따를 것



욱 가속화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결혼 적령기인 25~29세 연령층의 미혼율은 1970년의 9.7%에서 1995년에는 29.6%로 증가되었고,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내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와의 결혼에 따라 달라 나타나겠지만, 이와 같은 외국인과의 결혼이 우리 사회의 출산율 변동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권태환 :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여성의 결혼기피 현상은 우리 나라보다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이 흔해지고 있으며, 이렇게 구성된 가구들이 출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순수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출산율은 훨씬 더 낮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현재의 합계출산율 1.34명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성호 :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지난 한 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이 5,775명, 외국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이 4,775명이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 현실로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에 관한 심층연구가 부재인 상태에서 국제결혼이 출산율 변동에 미친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승권 : 미국의 출산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별 출산율을 비교하여 보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외국인과의 결혼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전체 사회의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 장 : UN발표에 의하면 2045년에서 2050년 사이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약 58개 국가가 인구감소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들 국가에 있어서는 노동인력의 부족과 인구의 노령화,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사회복지 등 제반 여파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노령화는 현 연령구조에 기인한 인구여파에 기인한 것이고 설사 출산율이 적정 수준의 도달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대략 25~30년 내에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대

책의 시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는 숙명적으로 받아 드리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의 적절하게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해 나타날 가족관계 및 사회·문화적 영향이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권태환 : 우선 가족관계 지속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경험하게 될 현 출생아들이 향후 출산연령이 될 경우에는 이들의 가족관은 더욱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므로 출산력이 감소할 것은 분명합니다.

박상태 : 혼인유형 내에서 저출산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전통적인 혼인유형 이외의 혼인유형 출현으로 인해 저출산이 야기되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잦은 이혼, 동성애가족 등장 등 전통적인 가족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가정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출산력 유지에 가장 적합한 가족 형태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권태환 : 새로운 가치관에 노출되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화된 연령층이 이제 드디어 출산연령에 도달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출산에 대해 전통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가족을 형성할 연령이 된 이들은 전통적인 가족 이외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출산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송위섭 : 현재 결혼연령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가치는 변화하여 한 자녀 혹은 무 자녀를 선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지만, 반대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어도 저출산이 형성된 사회에서는 자녀 양육보다 삶의 향유를 선택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출산수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승권 : 출산력 저하원인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산력 감소는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도 영향을 주지만 이보다 더 큰 요인은 젊은 미혼남녀의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관 증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만연 등으로 인한 결혼기피현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녀 초혼연

●
●
●
*사회변화에 따라
짚은 이혼,
동성애가족 등
전통적인 가족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가정들이
출현하고
.....
출산력 유지에
가장 적합한
가족형태가
사라지고 있음*

령 상승, 미혼율의 증가 등 통계자료에서도 잘 보여주세요.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출산을 저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서는 반드시 결혼기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좌 장 :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1997년부터 출산장려금제도를 도입했고, 전라남도도 명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출산장려운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산된다면 국민의 의식변화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출산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떠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요.

박상태 : 복지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의 기조에 따라 출산 촉진책을 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유급 육아휴직제의 도입 및 휴직기간 중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납부 유예, 아동수당제의

도입 등 여성, 노인, 자녀, 결혼에 대한 사회지원시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송위섭 : 선진 외국의 경험으로 보아 출산장려정책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독일이나 불란서의 경우 강력한 보조정책을 시행하였지만 근본적인 출산율 감소의 경향을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다만 현상유지에 도움이 될 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태환 : 출산력이 더 이상 저하되지 않고 현상유지만 되도 큰 성과로 평가될 수 있지요. 저는 노동력 공급문제와 관련하여 여성 노동력이 외국 노동력보다 질적인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을 잠시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출산력 저하는 곧 노동력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머지 않아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력 감소문제와 출산력 감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여성노동력 활용방안과 가족생활 안정방안을 동시에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여성을 시장에 진입시키고 이들이 부담없이 출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면 노동력 감소와 출산력 감소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태 : 여성의 취업증가는 자녀 양육과

가사문제로 오히려 출산율을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요.

권태환 : 스웨덴을 예로 들면, 출산휴가 등의 출산관련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 출산율 감소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취업증가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이에 대한 기반 마련을 통해 출산력 감소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송위섭 : 산업구조 변동에 따라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어 감에 따라 경제인구의 75% 이상이 서비스부문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파트타임 직종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노동시장의 참여는 파트타임 직종에서 중점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직종이 늘어나고 보육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출산율의 현 수준 유지나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태환 : 가족가치 변화에 따라 출산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혼외출산은 해당 여성 및 자녀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혼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혼자들 사이에서도 이혼후 자녀 및 여성에게 미칠 사회적 차별을 염려하여 자녀 출산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가족형태는 점점 감소되어 가고 사회는 아직 혼외출산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괴리는 출산력 감소를 더욱 부채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권 :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률이 현재 약 50% 정도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저소득층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산층 여성들은 현재 과거의 지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의 복귀가 불가능하고,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지위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이들 중산층 여성까지로 노동시장참여가 확대된다면 유배우자의 출산율에도 감소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박상태 : 여성의 초혼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만혼출산이 산모 및 태아에게 좋지 않다

● ● ●
*노동력 감소문제와
출산력 감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여성노동력
활용방안과
가족생활
안정방안을
동시에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

● ● ●

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만혼자들 사이에 기형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출산을 회피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건분야에서는 만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를 하는 것도 출산율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위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인해 저소득층에서 출산을 늘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만명이 넘는 대상자들에 대한 생활보장제도는 출산력 향상에 반드시 주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좌 장 : 인공유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약 60~70만건의 인공임신중절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중 80% 이상이 현행 모자보건법 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히 규제한다면 어느 정도 출산율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권태환 : 기혼자에게만 인공임신중절의 규제를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분위기에서는 효과적인 대안마련이 어려운 법인 것 같습니다. 자녀수의 결정이나 수태조절은 부부의 기본 권리이므로 현재와 같이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성호 :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한 해외 입양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공임신중절을 규제하는 것은 무리이고, 기혼과 미혼을 구분하여 규제하는 것도 무리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좌 장 : 기존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8년에 5280만명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유지될 경우 인구성장 정지 연도는 2020년으로 단축될 가능성도 있고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건강보험연구를 전담하고 계신 최병호 박사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최병호 : 인구동태의 변화는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걸쳐 구조적이고도 심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것인데요, 의료비는 고령기와 영유아기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청소년 및 장년기에는 비교적 의료비 발생이 적어지는 U자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근래에 고령기와 영유아기 사망률의 지속적인 감소가 의료비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의학수준의 발전으로 계속될 전망인데요, 특히 고령기에 들어 사망직전의 의료비지출이 매우 커짐을 감안할 때에 출산율과 사망률의 저하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의료비 지출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더구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축소는 의료비 재원의 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더더욱 압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좌 장 : OECD통계에 의하면 회원국의 연간 총 의료비 중 50% 이상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5년에서 1998년 기간중 전체 국민의 의료비는 연평균 19%가 증가한 반면에, 65세 이상은 28%가 증가되어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의료보험재정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병호 : 인구동태의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쉬운 해법은 없습니다만, 선진국의 경험에서 얻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건강보험수가의 포괄화(예, DRG 지불제의 도입, 총액진료비계약제 등)를 추진하는 것, 둘째는 의료공급자 독점의 의료시장의 특성상 의료비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공급자의 적정규모와 의료제공 행태에 대한 규제와 비용효과적인 유인장치의 도입, 셋째,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강구, 마지막으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료체계와 건강보험간 체계적 연계에 의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개선은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좌 장 : 선진국에서는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가정간호 및 주간 병원간호제의 도입, 가족을 포함한 개호자에 수당의 지급, 장기요양보험제 등을 도입하였으며, 만성질환 예방과 의료비 절감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

● ● ●
출산율과 사망률의
저하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의료비
지출을 더욱
가중시킬 것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축소는 의료비
재원의 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더더욱 압박하게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 하루속히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연금재정에도 상당한 여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연금재정추계는 연금수급연령을 2013년에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65세로 한다는 가정 하에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34년에는 보험료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고 2048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여과로 정년은 오히려 단축되어 가고 있고, 저출산에 의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연금재정 고갈시기도 훨씬 당겨 질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정년기간의 연장 또는 철폐, 연금재정을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전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정년의 연장 그 자체는 연금재정뿐 아니라 노동력 부족현상을 완화하

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권태환 :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상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산력 감소에 대한 원인규명, 대안마련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작업하여야 할 것입니다.

좌 장 : 권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 출산억제 시대에는 수많은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있었지요. 그러나 저출산의 사회, 경제적 여파는 실제로 더욱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학계 전문가이신 여러분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에 의한 사회경제적 여파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1.8명 수준으로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출산행태에 관한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때 저출산과 관련된 인구문제는 사회, 경제 제분야에서 관련정책을 일부 수정, 보완

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정년연령의 점증적 연장, 여성 및 건강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 지원시책의 강화,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가족 및 자녀에 관한 새로운 규범의 설정과 홍보 교육 등 사회, 경제, 문화적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96년에 정부가 채택한 신인구정책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되지만 실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출산율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구정책의 중요성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최단시일 내에 관련부처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종합적인 인구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